

유괴 미수 사건 잇따르는데 ...서울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율 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정책 질의에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율이 1%밖에 안 되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체 CCTV 약 1만7천대 중 단 197대의 CCTV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율은 약1%로 전국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평균 연계율이 19.7%인 것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훈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은 작년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으로 부터 한 차례 지적 받고, 국정감사 때도 지적 받았음에도 전혀 문제 해결 의지

가 없어보인다"며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통합관제 연계율에 대해 안전총괄담당관이 부끄럽게 여겨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 황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만약 지금처럼 학교 CCTV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된다면 CCTV의 사전 예방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2월 대전 하늘양 사건에 이어 초등학교 유괴 미수 사건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 잇따르고 있다"며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사고 및 교내 범죄 예방을 위해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 사항만 기다리며 손 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해줄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은 답변에서 "자치구에 협력을 도출하는 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0일 강남구보건소에서 열린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강남권 최초로 설치되는 중독 전문 지원기관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알코올·마약·도박·디지털 중독 등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민간위탁(서울성모병원) 형태로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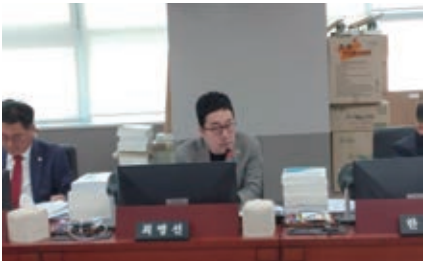
영되는 센터는,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임상·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 운영 체계를 구축했으며 ▲중독 조기 발견 및 개입 ▲상담·치료·재활 지원 ▲가족 상담 및 교육 ▲중독 피해 예방 교육 ▲지역사회 연계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총 6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삼 의원·전인수 의원·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황영각 의원·손민기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중독이 일상을 파고드는 현실에서, 선제적 예방과 올바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중독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교육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최병선 도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반복 수익계약·공고 단축 문제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수익계약 및 협상계약 운영과 공정성 문제를 집

중 질의했다.

윤덕룡 대표는 재단 연간 예산 1,572억 원 중 출연금이 약 500억 원이며, 국비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재단 계약 현황을 근거로 수익계약 비율이 여전히 57%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계약도 26.6%에 달하며, 일부 도내 특정 기업과의 반복 수익계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윤 대표는 "부임 이후 수익계약 비율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여성기업과 관련한 정책적 이유로 일정 부분 수익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협상계약 공고 기간 단축 문제를 거론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침상 1억~10억원 규모 협상계약의 공고 기간은 최소 20일이 권고되지만, 재단은 일부 사업에서 10일 미만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예로, 2025년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계약은 공고 기간이 3월 24일부터 31일까지로 단축됐다.

윤 대표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

겠다"고 답했다.또한, 사단법인 세계경제사회연구원과의 계약 관련, 수익계약과 협상계약으로 총 3건이 체결된 점에 대해 최 의원은 특정인과 반복 계약을 통한 매출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익계약 반복과 공고기간 단축은 결국 기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도내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엄정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송민수 기자

김영삼 대전시의원, “나노·반도체 산단 무능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0일(월)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지연을 단순 행정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반도체 산업 재편 속에서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수요 조사와 경제성 분석의 부실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타 신청 당시 16개 후보지 중 높은 평가를 받았고, 4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을 만큼 초기 수요 기반은 충분했다”며 “변수가 된 건 대전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가가 용인에 6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정하며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뀐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력 공급, 제조 인프라, 펌 집적도 등 구조적 경쟁 여건에서 지방의

개별 산단이 국가 단위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대전시의 무능이나 행정 실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반도체 단일 산업만으로 산단을 채우려고 하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당초 위원회와 집행부가 제안해왔던 우주·항공·AI·소부장 등 6대 전략산업 포트폴리오로 산업단지를 채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산업단지의 생존과 성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나노·반도체 산단 추진 과정에서 예타 통과·면제·비통과 등 모든 형태의 절차를 거치며 지방 분권과 지역산업 육성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산단 성공 전략을 국가 반도체 정책 흐름과 정합되게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전이 반도체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반도체에서 전략을 확장해야 하는 기점에 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국가 반도체와 대전 미래산업 연합 포트폴리오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재봉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상이군경회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1일 시의회를 방문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안성운 인천시지부장과 장익향 연수구지회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는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에게 품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인천시의회도 그 마음을 정책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그는 또 “인천시의회가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장은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의회, 보훈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11일 금산소방서와 논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 정책 개선과 현장 대응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불철주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과 개선 방안이 조속히 반영돼 충남도 소방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화재예산이 증가했음에도 화재 건수가 늘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집행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예방대책과 주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사고 예방을 위한 물결안 전지도 작성, 유실방지망 설치, 순찰 강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방안전은 소방서만의 몫이 아닌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정기 점검과 예방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도내 전통사찰은 목조 건축물이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며 “문화재 보호의 최전선에서 소방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대응의 성패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력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며 “지휘관 대

상 리더십 교육을 강화해 조직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금산소방서의 출동 내역을 보면 화재·구조·구급보다 생활안전 출동이 많아 대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운용과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울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헬기 응수 공급원 확보를 위한 이동식 수조 도입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불피움 신고가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논산의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이 소외계층에만 국한된 것은 문제”라며 “다른 시군처럼 모든 세대에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돌봄공백으로 인한 아동 희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에서 ‘돌봄공백세대 무상 감지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논산소방서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달라”고 피력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한 국타이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농공단지와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금산소방서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예방행정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우수사례가 도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이 전년 대비 8.8% 향상되고, 인명피해가 60% 가까이 감소한 것은 소방대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산지와 농촌지역이 많은 충남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장비 보강과 대응체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시민중심
큰 파주

제29회

파주장단콩축제

The 29th
PAJU
Jangdan
Soybean
Festival

2025. 11. 21. - 23.

파주 임진각관광지

주최 PAJU 파주시

주관 파주장단콩축제추진위원회

문산역에서 무료 셔틀버스 09:00~17:00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